

## 한국사회 빈곤원인 인식의 실태와 결정요인\*

이 상 록<sup>+</sup>

(전북대학교)

김 형 관<sup>++</sup>

(전북대학교)

### [요 약]

본 연구에서는 한국사회 구성원의 빈곤원인 인식 유형 및 분포, 주요 빈곤원인 인식의 결정양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사회가 지닌 빈곤에 대한 사회적 태도의 이해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는 빈곤원인 인식 항목이 새롭게 추가된 8차년도 한국복지패널조사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분석결과에서는 한국사회의 빈곤원인 인식이 개인책임 인식(individualism), 사회구조책임 인식(structuralism), 운명책임 인식(fatalism) 등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한국사회에서는 빈곤원인을 개인책임으로 인식하는 성향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빈곤원인 인식의 양상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사회경제적 수준, 가치태도 등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개인책임, 사회구조책임, 운명책임의 빈곤원인 인식에의 결정양상은 일부 차이를 보였지만, 대체로 가치태도 변수들이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한국사회 빈곤원인 인식의 실태와 특성을 보여주는 바로, 특히 빈곤을 개인책임으로 인식하는 성향이 높다는 분석결과는 한국 사회복지의 낙후성이 이와 같은 사회의식에 기반한 것일 수 있음을 시사하여 준다. 아울러, 빈곤원인 인식의 결정에서 가치태도의 주요한 영향은 복지국가 발전의 토대 조성에 사회문화적 맥락에도 정치적, 정책적 관심이 제고되어야 함을 시사하여 준다.

주제어: 빈곤, 대중인식, 빈곤원인, 가치, 빈곤속성

\* 본 논문은 제6회 한국복지패널학술대회(2013. 12)의 발표를 위해 작성된 논문이며, 익명의 심사위원들의 유익한 논평을 참조로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한 논문임.

+ 주저자.

++ 교신저자.

## 1. 서론

한국사회에서는 경제위기를 전후로 빈곤문제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 관심이 제고되는 추세인데, 사회구성원들은 빈곤 문제, 특히 빈곤의 원인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것일까? 곧, 한국사회에서 빈곤 원인은 개인의 부적절한 행동 및 태도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식되는 것일까, 또는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빈곤이 기인된 것으로 인식되는 것일까? 아니면, 빈곤은 개인적 불운 등과 관련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일까? 빈곤원인에 대한 개인간 인식 차이에는 어떤 요인들이 관련되고 있으며, 빈곤원인 인식 유형들의 결정에 주요하게 관련된 요인들은 무엇일까?

이와 같은 한국사회의 빈곤원인 인식이라는 주제에 본 연구가 주목한 이유는 첫째로 해당 사회의 빈곤원인 인식은 빈곤대책 뿐 아니라 주요 복지정책의 정치적 결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학술적 및 정책적 주목이 적극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이다(van Oorschot and Halman, 2000; Lepianka et al., 2009; Lepianka et al., 2010). 주지하듯 서구 국가들에서 사회복지의 역사적 전환에는 빈곤에 대한 사회적 태도 변화가 주된 배경이 되었음에 비추어 보면, 빈곤원인 인식은 복지국가의 역사적 특성 뿐 아니라 향후 복지정책의 전개 양상을 가늠하는 요소로 주요한 의의를 지닌다. 따라서, 한국사회에서 빈곤원인 인식의 파악은 복지 이슈들을 둘러싼 현재 및 앞으로의 복지정치 및 복지정책의 전개양상을 이해함에 단초를 제공하는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지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사회구성원의 빈곤원인 인식은 빈곤층의 행태 및 빈곤 양상에도 주요하게 관련된다는 점에서 학술적, 정책적 주목이 요청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빈곤문제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강조하는 복지체제론 혹은 비교사회정책론적 관점에서는 빈곤층의 행태는 개인 및 가족의 특성 뿐 아니라 지역사회 및 거시 사회의 가치, 의식, 규범 등에 의해서도 적극 규정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데, 빈곤층에 대한 사회적 스티그마 및 빈곤문화의 부정적 영향은 이를 예시하는 바로 평가된다(Goffman, 1963; van Oorschot and Halman, 2000). 이와 같은 관점들에 의거하면 해당 사회의 빈곤원인 인식 성향은 빈곤층에 대한 태도 및 빈곤정책에의 정치적 지지를 결정함에 주요한 근거로 작용할 뿐 아니라, 해당 사회의 빈곤문제 및 빈곤대책의 특성과 전개양상 등을 이해함에 중요한 사회적 맥락으로서 주요한 의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Svallfors, 2006; Niemelä, 2008).

이와 같은 빈곤원인 인식의 함의들에 주목하여, 서구에서는 70년대 후반 이후 관련 연구들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추세이다. 초기에는 주로 개별 국가의 서베이 자료를 활용하여 해당 사회의 빈곤원인 인식 유형 및 특성을 파악하는 연구접근이 주를 이루었으나, 90년대 후반 이후에는 국가간 빈곤원인 인식의 차이 및 복지체제 특성과 빈곤원인 인식의 관련성에 주목한 연구들로 심화되면서 분석접근이 다각화되는 추세이다(van Oorschot and Halman, 2000). 또한, 초기 연구에서는 주로 사회심리학 관점에 기초하여 개인 차원에서 빈곤원인 인식의 내면화 양상 규명에 초점을 두었다면(Bullock, 1999), 90년대 이후에는 사회정책학적 관점에서 사회대중의 빈곤원인 인식 실태와 이의 정치적, 정책적 영향을

규명하는 방향으로 연구범위가 확장되는 추세이다(Niemelä, 2008; Lepianka et al., 2010).

한편, 서구와는 달리 국내의 빈곤원인 인식에 대한 연구성과는 극히 미흡한 편이다. 1990년대 후반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국내에서도 빈곤 연구들이 활발하게 수행되었지만 한국사회의 빈곤 태도 및 빈곤원인 인식을 분석한 연구는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빈곤 인식을 주제로 한 관련 연구들로는 아동 및 청소년, 사회복지사, 차상위계층 여성 등을 대상으로 빈곤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는 분석들이 있지만(손태홍, 2006; 배효숙 외, 2007; 김정희, 2009; 정선옥, 2011; 2012; 임민정·박수경, 2012), 이들 연구는 주로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특정 집단에서 빈곤이 어떤 의미로 이해되는지를 파악함에 국한되어 사회 대중들이 지닌 전반적인 빈곤 인식 및 태도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부 연구는 대중매체 관련 프로그램의 내용 분석을 토대로 한국사회에서 빈곤층 및 빈곤이 어떻게 이해되는지를 간접적으로 가늠하고 있지만(이병량·박성진, 2003), 이들 연구 또한 사회구성원들의 실제적 빈곤원인 인식을 파악하는 것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는 점에서 제한적이다.

최근 한국사회에서도 빈곤층 및 빈곤문제에 대한 사회여론에 따라 주요 복지이슈들을 둘러싼 정책 결정이 상당하게 좌우되고 있어 사회구성원들의 빈곤 인식 및 태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대중들의 빈곤 인식과 태도를 파악하고자 한 연구 성과는 부재한 상황이다.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분석 자료의 미흡이 주된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8차년도 한국복지패널 복지인식부가조사에서 빈곤원인 인식에 대한 정보들이 새롭게 추가적으로 수집되었음에 주목하여, 이를 활용하여 한국사회의 빈곤원인 인식의 실태 및 이의 결정 양상을 시론적으로 분석,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한국사회의 빈곤원인 인식 양상에 대해서는 그간 단편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빈곤원인 인식의 성향이 평가되고 있을 뿐이다. 예컨대, 한국사회는 서구 복지국가들과는 달리 개인책임의 빈곤원인 인식이 강하며, 이러한 빈곤 인식의 영향으로 한국의 복지체제는 잔여적 특성이 두드러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도 하다(김영모, 1986; 최균·류진석, 2000). 또한, 일부에서는 90년대말 경제위기를 전후로 개인책임의 빈곤원인 인식이 약화되고 사회구조 책임 인식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기도 한다(이인재, 1998). 그렇지만, 이와 같은 논의들에서의 평가는 체계적인 빈곤원인 인식의 측정치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객관성 및 타당성이 미흡한 실정이다<sup>1)</sup>.

현 시점에서 한국사회 사회구성원들이 지니는 주요한 빈곤원인 인식의 양상은 어떠한 것일까? 빈곤의 원인을 개인의 부적절한 행태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기는 개인책임의 빈곤 인식이 높은 것일까? 사회책임의 빈곤원인 인식은 어느 정도나 분포하며, 어떤 집단들에서 이와 같은 인식이 두드러지는 것일까? 빈곤을 개인적 불운 등에서 비롯한 것으로 여기는 운명책임 인식은 어느 정도이며, 어떤 사람들에게서 이러한 인식이 두드러지는 것일까? 개인의 빈곤원인 인식에는 어떠한 개인적 특성들이 주요하게 관련되며, 빈곤원인 인식 유형의 결정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일까? 본 연구에

1) 국내의 일부 복지인식 연구들에서는 빈곤인식과 관련한 일부 문항을 복지인식의 하위 항목으로 구성하여 빈곤인식의 특성을 분석하였으나(김영모, 1986; 안치민, 1995; 이인재, 1998; 최균·류진석, 2000), 측정 항목 및 척도 활용의 미흡 및 조사 자료의 지역 제한 등으로 인해 한국사회의 빈곤원인 인식을 파악하기에는 연구내용이 단편적이다.

서는 이상과 같은 의문들에 대해 답을 찾아보고자 8차년도 한국복지패널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한국 사회 빈곤원인 인식의 실태와 특성 및 주요 원인인식 유형들의 결정 요인을 실증 분석, 규명하고자 하였다.

## 2. 선행연구 검토

### 1) 사회대중의 빈곤원인 인식에 대한 연구동향과 성과

빈곤문제는 인류사회의 전개와 함께한 주요 사회문제로서 사회과학을 위시한 제반 학문 분야들에 서도 빈곤 원인의 규명은 핵심 연구주제의 하나로 자리하여왔다. 이와 같은 역사적 배경에 입각하여 서구 국가들을 중심으로 빈곤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들의 상당한 축적 및 이에 토대한 빈곤 이론들의 발전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Blank, 2003). 반면, 사회대중의 빈곤원인 인식은 역사적으로 끊임 없이 논란과 갈등의 이슈가 되었고, 복지정책 및 복지국가 발전의 정치적 결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쳐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학술적 관심은 상대적으로 미약하여, 197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야 이에 대한 연구관심이 촉발되기에 이르고 있다.

사회대중의 빈곤원인 인식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은 Feagin(1972)의 연구가 최초로, 그는 11개의 빈곤원인 항목을 활용하여 미국사회의 빈곤원인 인식의 성향을 분석하였다. Feagin은 미국사회의 빈곤층 및 빈곤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잘못된 고정관념이 빈곤 및 복지 정책의 확충에 주요한 정치적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에 주목하여, 대중의 빈곤원인 인식 실태와 특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미국사회의 빈곤원인 인식은 개인책임(individualism), 사회구조책임(structuralism), 운명주의(fatalism) 등의 세 가지의 인식 유형으로 구성되고, 미국에서는 개인책임 인식이 두드러짐을 확인하였으며, 그리고 이와 같은 대중 인식이 미국 빈곤정책의 잔여적 특성과 밀접히 관련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후 미국(Kluegel and Smith, 1986) 뿐 아니라 호주(Feather, 1974), 영국(Furnham, 1982a: 1982b: 1985) 등에서 빈곤(실업)원인 인식에 대한 유사 연구들이 후속되었는데, 이들 연구를 통해 Feagin(1972: 1975)의 빈곤원인 인식 유형 구분의 적합성에 대한 검증과 더불어 이들 자유주의 성향의 국가들에서도 개인책임 빈곤(실업) 원인 인식이 높다는 점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1990년대 중반까지 빈곤원인 인식의 연구들은 미국을 중심으로 주도된 양상을 보였으며, 관련 연구들은 미국인의 빈곤원인 인식 성향 및 인구집단과 사회계층에 따른 빈곤인식의 편차, 빈곤원인 인식 결정의 맥락과 영향 요인의 파악에 상당한 성과를 산출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Nilson, 1981: Golding and Middleton, 1982: Kluegel and Smith, 1986: Smith and Stone, 1989: Kluegel et al., 1995: Hunt, 1996: Wilson, 1996: Bullock, 1999: Gilens, 1999).

1990년대 후반 이후에는 유럽에서 관련 연구들이 활발히 전개되는 추세로, 터키(Morcöl, 1997), 네

덜란드(Halman and van Oorschot, 1999), 아일랜드(Hardimann et al., 2004), 핀란드(Niemelä, 2008), 이탈리아(Norcia et al., 2010) 등에서 개별 국가 차원의 빈곤원인 인식 실태에 관한 분석 뿐 아니라 국가간 비교분석(van Oorschot and Halman, 2000; Lepianka, 2004; Lepianka et al., 2010; Blomberg et al., 2013)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빈곤원인 인식의 특성 및 결정 양상의 국가간 및 복지체제 유형간 차이가 적극 조명, 제기되는 상황이다.

한편, 90년대 이후로 빈곤원인 인식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수행되면서 분석초점 및 분석방법들도 다변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추세이다. 곧, 초기 연구들에서는 사회 전반의 빈곤원인 인식의 실태와 성향을 파악함에만 주로 주목하였음에 비해, 이후에는 주요 인구집단 및 소득계층간 빈곤원인 인식의 차이(Bullock, 1999)와 복지수급자 및 이민자, 사회복지실무자 등의 특정 인구집단의 빈곤원인 인식(Wilson, 1996; Cozzarelli et al., 2001; Sun, 2001; Bullock et al., 2003; Niemelä, 2011; Bromberg et al., 2013) 등이 심층 분석되기도 하는 등 분석초점이 다양화되고 세분화 되는 추세이다. 또한, 실태 분석의 차원을 넘어서서 빈곤원인 인식 유형들의 결정(형성) 양상을 파악하고자 하는 심층 분석들도 제고되는 추세이다(Niemelä, 2008; Lepianka et al., 2010). 특히, Lepianka 외(2010) 및 Blomberg 외(2013)는 개인의 빈곤원인 인식 결정에는 개인 특성 뿐 아니라 지역사회 혹은 국가적 수준의 사회경제적 상황 및 사회문화적 맥락 등도 관련될 수 있음에 주목하여, 다층 자료들을 결합한 분석을 수행하여 주목되고 있기도 하다.

한편, 국내에서는 빈곤원인 인식의 실태에 대한 파악조차 미흡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학술적 관심의 환기가 요청되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국내에서도 복지정책의 본격화로 복지문제에 대한 대중 인식이 주요 정책의 정치적 결정을 크게 좌우하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대중들의 빈곤원인 인식 파악은 복지정책 및 복지정책의 전개 양상을 가능하는 일환으로 학술적 및 정치적 주목이 요청되는 바라 평가된다. 특히, 복지체제 특성이 사회경제적 및 정치적 상황 뿐 아니라 사회문화적 측면에 의해서도 규정됨을 감안하면, 한국사회의 빈곤원인 인식은 한국 복지체제 낙후성의 배경을 포괄적으로 이해함에 새로운 단서일 수 있다는 점 또한 주목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해당 사회의 빈곤원인 인식은 빈곤층의 사회적 위상 및 사회적 거리감을 표명한다는 점에서(Cozzarelli et al., 2001; Svallfors, 2006), 한국사회 빈곤층의 사회적 배제와 박탈의 상황을 이해하는 맥락으로서도 적극 참조될 필요가 있기도 하다.

## 2) 빈곤원인 인식의 영향 요인

해당 사회 내부에서도 빈곤원인에 대한 개인적 인식에는 상당한 편차가 존재하는데, 빈곤원인 인식의 차이에는 어떠한 요인들이 관련된 것일까? 사회구성원들이 지닌 다양한 빈곤원인 인식 유형들, 곧 개인책임론, 사회책임론, 운명론적 인식은 어떠한 요인들에 의한 산물일까? 선행 연구들에서 확인된 주요 영향 요인들을 개인 수준 및 사회적 수준으로 구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빈곤원인 인식과 관련한 개인적 수준 요인들로는 먼저 성별, 연령, 학력, 사회경제적 지위 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들이 관련 요인으로 지적된다. 선행 연구들에서 빈곤원인 인식은 성별에 따라 차이

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경험적 분석결과는 상반되게 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연구는 여성에게서 사회구조 원인 인식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분석한 반면(Kluegel and Smith, 1986; Hunt, 1996; Sun, 2001), 일부 연구는 남성일수록 사회구조 원인 인식이 높은 것으로(Morcöl, 1997) 혹은 성별에 따른 빈곤원인 인식에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하여(Cozzarelli et al., 2001), 성별의 영향은 상반되게 평가되고 있다. 반면, 연령의 영향과 관련하여서는 “젊은 층일수록 사회구조 원인 인식이 높고, 고연령층일수록 개인책임 인식이 높다”는 점을 대부분의 연구들이 확인하고 있다(Feagin, 1972; Kluegel and Smith, 1986; Hunt, 1996; Morcöl, 1997).

소득계층지위도 빈곤원인 인식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대체로 “소득계층 지위가 낮을수록 사회구조 원인 인식이 높고, 소득계층지위가 높을수록 개인책임 인식이 높은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Kluegel and Smith, 1986; Forma, 1999; 2002; Svallfors, 2006). 한편, 학력의 영향은 선형적이지를 않고 역U자형의 관련성을 지닌 것으로 대체로 평가되고 있다. 곧, “저학력층과 고학력층에서는 사회구조 원인 인식이 높은 반면 중간 학력층에서 개인책임 인식이 높은 것으로” 관련 연구들에서 대체로 확인되고 있다(Feagin, 1975; Furnham, 1982a). 한편, 일부 연구는 학력수준과 운명론적 원인 인식간에 관련성(부적 관계)이 있음을 지적하기도 한다(Morcöl, 1997).

개인의 빈곤원인 인식에는 주관적 경제적 지위 인식 또한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고 인식하거나 혹은 자신의 경제적 지위가 빈곤층에 가깝다”고 인식할수록 대체로 빈곤 원인을 외재적 측면(사회구조 혹은 운명)에 소재한 것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높고, “스스로의 경제적 형편을 여유롭고 빈곤층과는 거리가 멀다”고 인식할수록 개인책임 빈곤원인 인식이 두드러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Nilson, 1981; Kluegel and Smith, 1986; Saunders, 2003)

빈곤원인 인식에 주요하게 관련된 두 번째 요인으로는 개인적 경험이 지적된다. Bullock(1999)은 “어려운 상황(disadvantages)의 경험”이 빈곤원인 인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지적하는데,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 과거 이미지를 해소하고자 하는 성향으로 인해 불우한 상황의 경험자일수록 빈곤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평가한다. 그렇지만, 일부에서는 불우한 계층과 사회적 거리를 두고자 하는 이유에서 불우한 상황의 경험자일수록 오히려 개인책임 인식이 높은 것으로 주장하기도 하여 흥미롭다(Lepianka et al., 2010).

빈곤원인 인식과 개인적 경험의 관계는 과거 빈곤경험의 영향을 통해 주로 분석되고 있는데, 관련 연구들에서의 평가는 상반되게 제시되는 상황이다. 곧, 빈곤경험은 빈곤층과의 집단인식 공유를 기반으로 사회책임 빈곤원인 인식을 높일 것으로 평가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부정적인 이미지의 빈곤층과 거리두기를 하려는 성향으로 인해 개인책임 빈곤원인 인식을 높이는 것으로 지적되기도 한다(Niemelä, 2008). 한편, 공공부조 등의 복지수혜 경험 등도 관련 요인의 하나로서 분석되고 있는데, 이의 영향 역시 상반되게 평가되고 있다. 곧, 복지수급 경험자에게서 사회책임 원인 인식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기도 하지만(Niemelä, 2008), 반대로 복지수급자의 부정적 이미지에 기반하여 복지수급의 경험은 개인책임 원인 인식과 정적(+) 관련성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Bullock, 1999; 2004).

셋째로는 개인의 가치태도의 측면이 주요 영향 요인으로 지적된다. 개인의 정치이념 성향은 빈곤원인 인식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경험적 연구들에서는 대체로 “보수적 성향

일수록 개인책임 인식이 높고, 진보적 성향일수록 사회책임 원인 인식이 높음”을 대체로 확인하고 있다(Feagin, 1975; Furnham, 1982a; Lee et al., 1990; Lee et al., 1992; Cozzarelli et al., 2001; Norcia et al., 2010; Niemelä, 2011). 근로윤리 의식도 주요한 가치태도 요인의 하나로 분석되고 있는데, “근로윤리 의식이 높을수록 빈곤층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높고, 이와 함께 개인책임 원인 인식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관련 연구들에서 확인되고 있다(Furnham, 1982b, Feather, 1985; Furnham, 1985; Cozzarelli et al., 2001). 분배정의(평등)의식 또한 빈곤원인 인식의 결정과 관련한 가치태도 요인의 하나로 지적되는데, “평등주의 의식이 강할수록 재분배에 지지적이고, 사회책임의 빈곤원인 인식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Harper et al., 1990, Lepianka et al., 2010). 한편, 종교적 성향도 주목되는 가치 태도의 변수의 하나인데, “개신교의 경우에는 개인책임 빈곤원인 인식이 높은 반면 가톨릭의 경우에는 사회구조 혹은 운명론적 원인 인식이 높은 것으로” 관련 연구들에서 대체로 확인되어 흥미롭다(Lepianka et al., 2010). 마지막으로, 복지정책 및 복지수급자에 대한 태도 또한 주요 요인의 하나로 주목되고 있는데, “복지정책 및 복지수급자에 긍정적인 태도를 지닐수록 개인 외부의 측면에서 빈곤원인을 인식하는 성향이 높은 것으로” 경험적 분석들에서 확인되고 있다(van Oorschot and Halman, 2000; Kangas, 2003)

한편, 개인의 빈곤원인 인식에는 해당 사회의 특성 또한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곧, 해당 사회의 사회경제적 상황 및 구조적 특성, 복지체제의 특성, 해당 사회의 가치와 규범 등의 문화적 특성 등은 개인의 빈곤원인 인식의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국가간 빈곤원인 인식 차이에도 배경이 되는 것으로 관련 논의들에서 지적되고 있다(Gallie and Paugam, 2002). 일례로, 개인의 빈곤원인 인식은 사회경제적 상황에 의해서도 상당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경기침체 혹은 고실업의 상황일수록 개인책임의 원인 인식은 낮은 반면 외재적 원인 인식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해당 사회의 복지체제 특성 또한 관련되는 측면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선별주의적 복지체제일수록 개인책임 빈곤원인 인식의 성향이 높고, 반면 보편주의 복지체제일수록 사회책임 빈곤원인 인식이 높은 경향을 보일 것으로” 여기지고 있다(van Oorschot and Halman, 2000). 개인의 빈곤원인 인식은 또한 해당 사회의 사회문화적 특성에 의해서도 적극 규정되는 것으로 평가되는데, 관련 경험 연구에서는 “해당 사회의 종교적 성향, 근로윤리 규범, 분배정의의 가치 등이 개인의 빈곤원인 인식 결정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기도 하다(Lepianka et al., 2010).

한국사회의 빈곤원인 인식은 어떤 요인에 의해 주요하게 결정되는 것일까? 이상에서 살펴본 선행 연구들의 성과를 참조하여, 본 연구에서는 인구학적 특성, 사회경제적 특성, 복지수급, 가치태도 특성 등의 개인 특성 요인들을 중심으로 한국사회 빈곤원인 인식의 결정 양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물론, 개인의 빈곤 인식에는 사회의 제반 특성들도 주요하게 관련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맥락에 대한 고려도 요청되지만, 이는 국가간 비교분석을 통해 접근되어야 할 부분으로 본 연구의 분석범위를 넘어서는 연구주제라 평가된다. 이는 후속 연구에서 수행되어야 할 연구과제로 남겨두고,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사회 빈곤원인 인식의 결정 양상을 분석, 평가하고자 한다.

### 3. 연구방법

#### 1)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본 연구 분석에 활용한 데이터는 한국복지패널조사자료이다. 한국복지패널조사자료는 한국사회 구성원의 제반 생활 상태와 복지욕구 등을 파악하고자 전국을 대표하여 표집한 가구 및 가구원을 대상으로 2006년도 이후 매년 추적조사를 통해 자료를 축적하는 종단 데이터로, 여기에서는 3년 단위(2007년, 2010년, 2013년)로 복지인식에 대한 부가조사를 병행하고 있다. 금번 8차년도 복지인식조사에는 기존 복지인식 조사문항과 더불어 빈곤원인 인식에 관련한 문항을 새롭게 추가하여 관련 정보가 수집되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본 연구는 8차년도 한국복지패널조사 자료가 한국사회 빈곤원인 인식의 실태와 특성, 결정 양상을 파악함에 적합한 데이터라는 점에 주목하여, 가구 및 가구원 데이터를 결합하여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8차년도 복지인식 부가조사에 응답한 가구는 2,297가구, 성인 가구원 4,720명이었고, 관련 조사 모두를 완료한 응답자는 4,185명이었는데 이중 응답이 부실한 자료를 제외한 총 4,183명을 분석대상으로 가구 및 가구원용 자료와 결합하여 분석데이터를 구성하였다<sup>2)</sup>.

한편, 연구문제들의 분석에는 SPSS 19.0과 AMOS 21.0을 활용하였고,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분석,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 다변량분산분석(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 MANOVA), OLS회귀분석방법 등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경우, 빈곤원인 인식의 실태 및 이들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빈곤원인 인식의 유형을 도출함이 요청되는데,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사전 분석의 일환으로 빈곤원인 인식 유형에 대한 기존 이론적 논의들에 기초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한국사회의 주요 빈곤원인 인식 유형들을 도출하였다<sup>3)</sup>. 이후에는 이를 기초로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분석 등을 통해 한국사회의 빈곤원인 인식 유형별 분포와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고, MANOVA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개인 특성에 따른 빈곤원인 인식에의 차이들을 살펴보

2) 정확한 모수 추정을 위해 표본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기도 하는데,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4,000케이스가 넘는 대규모 표본으로 변수들의 실제 영향을 추정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평가되기에 별도의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가중치 적용 여부에 따른 분석결과상 차이가 있는지를 추가적인 분석들을 통해 검토하여 보았는데, 가중치 적용여부에 따른 변수 영향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후에 제시되는 결과치들은 가중치를 적용치 않은 분석 결과임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3) 요인분석 모델은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으로 구분되는데, 탐색적 요인분석은 요인 구분에 대한 이론적 논의들이 미흡하거나 부재하여 최적의 요인 구조를 탐색함이 필요할 경우에 사용되는 모델인 반면, 확인적 요인분석은 관련 이론적 논의들에 기초하여 요인 구조의 적합성을 검증함에 주로 활용되는 모델이다(양병화, 2006). 한국복지패널조사에서의 빈곤원인 인식 측정항목은 빈곤원인 인식의 유형에 관한 기존 이론적 논의 및 경험적 연구들에 기초하고 있어(Feagin, 1972; 1975; Furnham, 1982a; 1982b; 1985; Niemelä, 2008; Lepianka et al., 2009), 본 연구에서는 확인적 요인 분석 모델을 적용하여 인식 유형 구분의 적합성 및 척도 활용에의 신뢰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고자 하였다. 끝으로, 한국사회 구성원들의 빈곤원인 인식 유형의 결정양상은 개별 빈곤원인 인식(개인책임 인식, 사회구조책임 인식, 운명책임 인식)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사회경제적 특성, 가치태도 특성들을 독립변수로 투입한 OLS 회귀분석모델을 적용한 분석을 통해 이를 분석 규명하고자 하였다.

## 2) 변수 구성 및 측정

연구문제 분석을 위한 관련 변수들의 구성 및 측정은 다음 <표 1>과 같다. 분석모델의 종속변수인 “빈곤원인 인식”은 개인이 지닌 빈곤원인 인식 성향을 파악하기 위한 변수로, 본 연구에서는 관련 연구들에서 빈곤원인 인식의 측정에 널리 활용되는 Feagin(1972)의 척도를 활용하여 이를 측정하였다.

빈곤원인 인식 연구들에서는 빈곤원인 인식의 유형을 어떻게 구분하여 측정할 것인지가 분석상 쟁점이 되기도 하는데, Feagin(1972, 1975)을 비롯한 관련 선행 연구에서는 개인 책임(individualism), 사회구조 책임(structuralism), 운명 책임(fatalism) 등이 사회대중이 지닌 빈곤원인 인식의 주요 유형임을 다양한 국가들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Feather, 1974; Smith and Stone, 1989; Morcöl, 1997; Bullock, 1999; Hunt, 2002; Niemelä, 2008)<sup>4)</sup>.

한국복지패널조사에서 빈곤원인 인식에 관한 조사항목은 Feagin(1972)의 측정을 참조로 세 개의 원인 인식 유형을 구성하는 10개의 빈곤원인 항목을 통해 측정되고 있다<sup>5)</sup>. 주요 연구문제들의 분석에

4) 빈곤원인 인식에 관한 연구들에서 빈곤원인 인식의 유형 구분은 이론적 논의 및 분석상 주요한 쟁점이기도 하다. Feagin(1972) 등에 기초한 미국과 영국 등의 빈곤원인 인식 연구들은 사회대중의 빈곤원인 인식 유형이 개인책임론, 사회구조책임론, 운명론 등 세개의 유형으로 구성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그렇지만 van Oorschot and Halman(2000) 등은 사회대중의 빈곤원인 인식을 세 개 유형으로 포착할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특히 운명 원인 인식의 모호성 문제를 지적하면서 개인책임, 사회구조책임, 개인 운명(불운), 사회운명(숙명) 등의 4개 유형으로 빈곤원인 인식을 파악함이 적절할 수 있음을 제기한다. 유럽 국가에서 빈곤원인 인식에 관한 연구들은 대체로 이와 같은 4개의 빈곤원인 인식 유형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특히 이들 연구가 활용하는 분석데이터(EVS: European Values Study)의 자료가 4개 유형의 빈곤원인 인식에 대한 응답치로 구성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EVS 데이터는 단 하나의 설문문항(4개 빈곤원인 인식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문항)으로만 빈곤원인 측정이 이루어져, 개인들이 지닌 중층적 원인 인식의 실재를 파악함에 있어 한계를 지닌 것으로 비판된다(Lepianka et al., 2009). Feagin(1972) 등의 요인분석 방법에 기초한 측정은 세 개의 빈곤원인 인식 유형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제한성을 지니지만, 개인이 지닌 빈곤원인 인식의 비일관성과 양면성 등의 실제적 인식 양상을 포착함에 보다 적절한 측정방식으로 평가된다. 복지패널 데이터의 빈곤원인 인식 자료는 Feagin(1972)의 측정방식에 기초하여 마련된 관계로, 본 연구에서는 세 개 유형의 빈곤원인 인식 유형을 기준으로 한국사회 빈곤원인 인식의 실태와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5) 8차년도 한국복지패널조사자료의 빈곤원인 인식 측정항목은 Feagin(1972)의 10문항과 더불어 “개인 학력수준의 미흡”이라는 1문항이 추가된 총 1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대다수 국내 빈곤 연구들에서 빈곤결정의 주요 원인의 하나로 파악되는 “학력 미흡” 또한 한국사회에서 주요 항목일 수 있음에 의거하여 추가된 부분이다. 그렇지만, 유형 구분을 위한 탐색적 요인 분석들에서 “학력 미흡” 문항은 사회구조 책임 인식으로(요인 수 미지정 탐색적 요인분석) 혹은 운명책임 인식으로 분류되기도 하여(요인 수 지정 탐색적 요인분석), 일관된 경향을 확인하기 어려운 항목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개인 학력수준의 미흡” 설문항목이 빈곤원인으로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음에서 비롯

앞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의 빈곤원인 인식을 “개인 책임”, “사회구조 책임”, “운명 책임” 등의 세 개 유형으로 구성하여 분석하는 것이 적합한지, 곧 본 연구의 종속변수 측정의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10개의 빈곤원인 인식 문항에 대해 확인적 요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표 1> 변수 구성 및 측정

변수명		변수 정의 및 측정설명	
종속변수	빈곤원인의 인식	주요 빈곤원인 인식 유형에 대한 태도 측정치 (Feagin(1972)의 빈곤원인 인식 측정 척도 및 결과 활용)→ 10개 빈곤원인항목(4점측정)과 3개 빈곤원인인식 유형	
	(1) 개인책임 인식	•동기 및 노력의 결여 •부적절한 가계(돈) 관리와 절약의 결여 •책임감 및 자기규율 결여(총3문항) (Cronbach's $\alpha$ 0.707)	
	(2) 사회구조책임 인식	•충분한 교육기회 제공의 부족 •좋은 일자리 공급의 미흡 •사업체들의 낮은 임금 •빈곤층 및 일부 집단에 대한 편견과 차별 (총 4문항) (Cronbach's $\alpha$ 0.724)	
	(3) 운명책임 인식	•타고난 능력(재능)의 부족 •개인적인 질환(질병)과 신체적 장애 •개인적인 불행과 불운(불우한 가족배경 등) (총 3문항) (Cronbach's $\alpha$ 0.491)	
독립변수	인구 사회 특성	성별	남, 여
		연령	세(연속)
		가구형태	일반가구, 취약가구(단독/한부모/소년소녀가장 등)
		종교	있음, 없음
	사회 경제 특성	거주지역의 특성	농어촌, 중소도시, 대도시
		학력수준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재) 이상
		가구 경제수준	욕구소득비(연속)
	복지 수급	월평균 가구소득	100 미만, 100~200 미만, 200~300 미만, 300~400 미만, 400~500 미만, 500 이상 (만원)
		취업지위	고용주/자영업자, 상용직, 임시/일용/자활, 무급/실업, 비경제
	가치 태도	복지서비스 수급	복지서비스의 수급 경험→있음, 없음
		현금급여 수급	현금급여의 수급 경험→있음, 없음
		정치적 성향	본인의 정치이념 성향(매우 보수적(1)~ 매우 진보적(5))
복지수급자 태도		기초보장수급자의 특성(“게으르다”)에 대한 태도 (매우 반대(1) ~ 매우 동의(5))	
가치 태도	성장/분배 태도	성장/분배의 중요도에 인식(친성장주의(1)~친분배주의(4))	
	복지정책 태도 (선별주의 - 보편주의)	복지정책의 접근방식에 대한 태도 (가난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해야 함(1) ~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함(5))	

한 결과라 평가된다. 곧 충분한 교육기회가 제공되지 못하여 개인 학력수준이 미흡할 수도 있고(사회구조 책임), 개인 태도 및 동기 결여에서 비롯할 것일 수도 있으며(개인 책임), 가족형편 등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운명 책임)로도 해석될 수 있는데서 초래된 결과로 평가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개인 학력수준의 미흡” 문항을 제외한 총 10문항으로 빈곤원인 인식을 측정, 분석하였다.

〈표 2〉는 확인적 요인 분석의 결과로, 모델 적합도 지수인 TLI=.956, CFI=.971, RMSEA=.058로 산출되어 적절한 모형 적합도를 지닌 것으로 분석되었고, 모든 변수들의 요인적재량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측정 변수들은 잠재 변인을 적절히 반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곧 10개의 항목들은 세 개의 빈곤원인 인식 유형, 곧 개인책임 인식(태도의 결여, 동기 및 노력의 결여, 책임감 등의 결여)과 사회구조책임 인식(낮은 임금, 좋은 일자리의 부족, 교육기회의 부족, 편견과 차별), 그리고 운명책임 인식(타고난 능력의 부족, 질환과 장애, 불행과 불운)으로 세 개 요인으로 구분함이 타당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바로, 서구 국가들과 유사한 형태로 빈곤원인 인식 유형이 구성되고 있음을 또한 보여 준다.

〈표 2〉 빈곤원인 인식 유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S.E.	C.R.
개인책임 인식 → 태도의 결여	1.000	.703		
개인책임 인식 → 동기/노력의 결여	.924	.685	.031	29.985***
개인책임 인식 → 책임감의 부족	.847	.621	.029	29.131***
사회구조책임 인식 → 낮은 임금	1.000	.610		
사회구조책임 인식 → 교육기회의 부족	1.127	.649	.039	29.163***
사회구조책임 인식 → 일자리의 부족	1.154	.662	.039	29.443***
사회구조책임 인식 → 편견과 차별	1.054	.600	.038	27.880***
운명책임 인식 → 질환과 장애의 발생	1.000	.504		
운명책임 인식 → 개인적 불행과 불운	1.074	.493	.054	20.020***
운명책임 인식 → 타고난 능력부족	.964	.485	.049	19.842***

\*\*\* p<.001

이상과 같은 요인분석 결과에 따라, 본 연구의 빈곤원인 인식은 ‘개인책임 인식’, ‘사회구조책임 인식’, ‘운명책임 인식’의 세 개 하위 종속변수들로 구성, 측정하였다<sup>6)</sup>. 하위 빈곤원인 인식의 측정 신뢰도(Cronbach’s  $\alpha$ )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는 개인책임 인식의 측정 신뢰도는 0.707, 사회구조책임 인식 항목의 측정 신뢰도는 0.724로 분석되어, 척도로서 충분한 신뢰도를 지닌 것으로 검증되었다. 그렇지만, 운명책임 인식의 계수치는 0.491로 분석되어 다소 낮은 신뢰도 수준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측정 항목들이 운명책임의 빈곤원인 인식 정도를 파악하기에 다소 충분치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바로, 분석결과와 검토에 이와 같은 측정상 제한성이 염두하여야 함을 제기하여 준다<sup>7)</sup>.

한편, 본 연구 분석모델의 독립변수로는 선행 연구들에서의 논의 및 경험적 분석을 참조로 빈곤원

6) 본 연구 분석에서 종속변수인 세 유형의 빈곤원인 인식 측정치로는 요인분석결과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구성 항목들간 강도(intensity)가 동일하여 차별화된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고 해당 문항들의 평균값으로 산출, 활용하였다.

7) 한국사회의 빈곤원인 인식 실태를 개인책임, 사회구조책임, 운명책임 등 3개의 빈곤원인 인식 유형으로 파악함이 적절할 수 있지만, 운명책임 측정항목의 신뢰도가 다소 충분치 않음을 보여주는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운명책임 인식을 측정하는 항목들의 구성 및 내용 타당성에 대한 심층적인 재검점 및 보완이 추후 부수될 필요가 있음을 과제로 제기하여 준다.

인 인식에 주요하게 관련되는 것으로 평가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사회경제적 특성, 가치태도, 복지수급 경험 등의 관련 변수들로 구성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는 성별, 연령, 가구형태, 거주지역, 종교 등을 관련 변수로 설정하여 빈곤원인 인식과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sup>8)</sup>. 사회경제지위의 특성 변수로는 학력, 가구총소득(월평균), 욕구소득비, 취업지위 등으로 구성하여<sup>9)</sup> 빈곤원인 인식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한편, 가치태도 측면은 선행 연구들에서 개인간 빈곤원인 인식의 편차의 파악 및 빈곤원인 인식의 결정에서 주목되는 요인으로 다루어지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정치이념 성향, 성장 vs 분배에 대한 태도, 복지정책 접근(보편주의 vs 선별주의)에 대한 태도, 복지수급자(특성)에 대한 태도 등의 변수들로 설정하여, 빈곤원인 인식과 가치태도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끝으로, 복지수급의 경험도 빈곤원인 인식 결정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결과를 참조로, 본 연구에서도 복지서비스와 사회보장(현금)급여의 수급 경험 변수들을 투입하여 이의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 4. 분석결과

### 1) 분석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분석에 활용된 조사자료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3>과 같다.

대상자의 성별 분포는 여성 2,390명(57.1%), 남자 1,793명(42.9%)으로 구성되어 있고, 연령대별 분포는 30대 이하가 21.4%, 40대 18.0%, 50대 17.0%, 60대 15.3%, 70세 이상 28.2%으로 60세 이상 노령층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학력수준은 중졸이하 43.4%, 고졸 26.8%, 전문대 이상 29.8%로 분포하였으며, 종교 보유의 양상은 종교 있음이 54.6%, 종교 없음이 45.4%으로 분석되었다.

가구형태의 분포는 일반가구가 83.6%, 한부모가구 등의 취약가구가 16.4%로 확인되었고, 거주지역의 분포는 대도시 42.1%, 중소도시 41.1%, 농어촌 16.8%로 나타났다. 욕구소득비를 기준한 소득계층의 분포는 빈곤층(욕구소득비 1.0 미만) 10.3%, 저소득층(1.0~1.5 미만) 15.3%, 중간소득층(1.5~3.0 미만) 37.8%, 상위소득층(3.0~5.0 미만) 36.6%, 최상위소득층(5.0 이상)은 11.5%로 확인되었고, 취업형태는 고용주 및 자영업 15.0%, 상용직 19.5%, 임시일용직 20.0%, 실업/무급가족종사 6.5%, 비경제활동 39.0%로 나타났다. 한편, 가구의 복지서비스 수급 경험은 70.9%, 현금복지의 수급 경험은 31.7%

8) 선행 연구들에서 종교의 영향은 주로 종교 유형으로 분석되고 있지만, 한국복지패널조사에서 종교 문항은 종교 유무로 측정되어, 본 연구에서는 종교 보유의 영향만이 분석되고 있다.

9) 욕구소득비(income to needs ratio)는 가구규모를 반영한 경제적 수준의 측정치로, 최저생계비에 대비한 가구균등화 지수 적용의 가구소득 비율로 산출하였다. 구체적인 분석에는 가구의 경제적 수준과 빈곤원인 인식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연속변수로 측정된 욕구소득비 변수를 활용하기도 하였지만, 욕구소득비를 급간으로 구분한 소득계층지위 변수를 분석에 활용하기도 하였다(빈곤층(욕구소득비 1.0 미만), 저소득층(1.0~1.5 미만), 중위소득층(1.5~3.0 미만), 상위소득층(3.0~5.0 미만), 최상위소득층(5.0 이상)).

로, 복지수급 경험율이 예상보다 높게 분석되었는데 이는 조사 대상자 구성에서 노령층의 비중이 높은데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표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4,183)

변수		빈도 (%)	변수		빈도 (%)
성별	남	1,793(42.9)	취업 지위	고용주/자영업	629(15.0)
	여	2,390(57.1)		상용직	815(19.5)
연령	30대 이하	895(21.4)		임시/일용/자활	836(20.0)
	40-49세	755(18.0)		실업자/무급	271(6.5)
	50-59세	711(17.0)		비경제활동	1,632(39.0)
	60-69세	642(15.3)		복지서비스 수급 경험	있음
	70세 이상	1,180(28.2)	없음		1,219(29.1)
	평균 55.40세(최소 21, 최대 94)			사회보장 급여수급	있음
가구 형태	일반가구	3,498(83.6)	없음		2,859(68.3)
	취약가구	685(16.4)	정치 이념 성향	매우 보수	360(8.6)
종교	있음	2,284(54.6)		보수	1,078(25.8)
	없음	1,899(45.4)		중도	1,918(45.9)
거주지역 규모	대도시	1,762(42.1)		진보	728(17.4)
	중소도시	1,720(41.1)		매우진보	99(2.4)
	농어촌	701(16.8)	성장/분배 태도	매우 친성장적	363(8.7)
학력 수준	중졸 이하	1,850(43.4)		친성장적	1,692(40.4)
	고졸	1,123(26.8)		친분배적	1,736(41.5)
	전문대(재) 이상	1,245(29.8)	매우 친분배적	391(9.3)	
소득 계층 (육구소득비 기준)	빈곤층	431(10.3)	수급자 태도 (게으름)	매우 동의	269(6.4)
	저소득층	638(15.3)		동의하는 편	1,304(31.2)
	중위소득층	1,582(37.8)		보통	1,179(28.2)
	상위소득층	1,532(36.6)		동의않는 편	1,277(30.5)
	최상위소득층	482(11.5)		매우 동의 않음	154(3.7)
	평균 2.8935(최소 0, 최대 34.22)			복지정책 태도 (대상범위 선별-보편)	매우선별적
가구 소득(월)	100만원 미만	658(15.7)	선별적		1,248(29.8)
	100~200만원 미만	890(21.3)	보통		825(19.7)
	200~300만원 미만	606(14.5)	보편적		472(11.3)
	300~400만원 미만	584(14.0)	매우보편적		876(20.9)
	400~500만원 미만	491(11.7)			
	500만원 이상	954(22.8)			
평균 356 (최소 0, 최대 606)					

대상자의 정치이념 성향은 보수 34.4%, 중도 40.1%, 진보 19.8%로 분포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진보 성향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수 성향의 비율이 15%로 높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성장과 분배에 대한 태도는 친성장적 태도가 49.1% 친분배적 태도가 50.8%로서 유사한 비율로 양분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복지수급자에 대한 태도도 “복지수급자의 부정적 특성(게으르다)”에 동의하는 경우 37.6%, 동의하지 않는 경우 34.2%로, 찬반 태도의 비중이 거의 비슷하게 분포하였다. 그렇지만, 복지정책(대상 범위) 태도에서는 “빈곤층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선별주의 복지태도가 48%,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보편주의 복지태도의 비율은 32.2%로 분석되어, 상대적으로 선별주의

태도가 다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2) 빈곤원인 인식의 실태

그렇다면, 한국복지패널 데이터에서 확인된 한국사회의 빈곤원인 인식은 어떠한 모습일까? 다음 <표 4>는 빈곤원인 및 빈곤원인 인식 유형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로, 한국사회 구성원들의 빈곤 원인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실태와 성향을 시사하여 준다.

<표 4> 빈곤원인인식 유형별 분포 및 실태(n=4,183)

구분	개인책임론			사회구조책임론				운명책임론		
	태도 결여	노력 부족	책임감 부족	낮은 임금	교육기 회부족	일자리 부족	사회적 편견과 차별	개인적 불운	능력 부족	질병 장애
적극 반대	67 (1.6)	49 (1.2)	42 (1.0)	99 (2.4)	175 (4.2)	119 (2.8)	210 (5.0)	225 (5.4)	186 (4.4)	70 (1.7)
반대	492 (11.8)	372 (8.9)	373 (8.9)	594 (14.2)	1233 (29.5)	753 (18.0)	1,351 (32.3)	1,179 (28.2)	1,470 (35.1)	733 (17.5)
동의	2,109 (50.4)	2,131 (50.9)	1,937 (46.3)	2,313 (55.3)	2,114 (50.5)	2,124 (50.8)	2,034 (48.6)	1,941 (46.4)	2,014 (48.1)	2,042 (48.8)
적극 동의	1,515 (36.2)	1,631 (39.0)	1,831 (43.8)	1,177 (28.1)	661 (15.8)	1,187 (28.4)	588 (14.1)	838 (20.0)	513 (12.3)	1,338 (32.0)
평균	3.213	3.278	3.329	3.092	2.779	3.047	2.717	2.812	2.682	3.111
표준 편차	.7062	.6699	.6777	.7414	.7139	.7561	.7586	.8134	.7423	.7414
유형 평균	3.2729			2.9089				2.8681		

표의 분석결과에서 10개의 빈곤원인 항목 중 가장 높게 지지(적극 동의 및 동의)되는 빈곤원인 항목은 '당사자의 책임감 부족'(90.1%)이었고, 다음으로는 '노력 부족'(89.9%), '절약 및 가계관리 등의 태도 미흡'(86.6%) 등으로 나타나, 한국사회에서는 주로 개인 책임과 관련된 측면들이 빈곤원인으로 적극 인식되고 있는 상황임을 보여준다. 반면, 가장 낮게 지지되는 빈곤원인 항목은 '타고난 능력의 부족'(60.4%), '사회적 편견과 차별'(62.7%), '교육기회 부족'(66.3%), '개인적 불행 및 불운'(66.4%)으로 분석되어, 상대적으로 사회구조 책임의 원인 인식과 운명책임의 원인 인식은 낮은 편임을 보여준다.

한편, 빈곤원인 인식의 유형별 평균치에서도 개인책임론의 평균점수는 3.27, 사회구조책임론은 2.91, 운명책임론은 2.87로 분석되어, 개인책임 빈곤원인 인식의 성향이 보다 두드러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서구의 선행 연구들에서는 서유럽 복지국가들은 대체로 사회구조 책임의 인식이 높은 것으로, 반면 미국 및 호주 등에서는 개인책임의 빈곤원인 인식 성향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음을 감안하면,

한국사회 빈곤원인 인식의 성향은 대체로 자유주의 복지국가들의 빈곤원인 인식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된다.

사회구성원의 빈곤원인 인식 성향이 해당 국가의 복지지출 및 복지정책의 특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논의들(Feagin, 1972; Feather, 1974; Furnham, 1982a; Kluegel and Smith, 1986; Bullock et al., 2003)에 비추어 본다면, 한국사회 복지발전의 지체 양상에는 사회 대중의 개인책임 빈곤원인 인식의 성향이 주된 배경의 하나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 3) 개인 특성에 따른 빈곤원인 인식의 차이

사회구성원들의 빈곤원인 인식은 해당 사회의 특성에 따라 국가간 차이를 보이기도 하지만, 일국 내에서도 개인 및 집단의 특성에 따라 빈곤원인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의 개인 특성에 따른 빈곤원인에 대한 인식 차이를 파악하고자 MANOVA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았다. 표의 분석결과에서는 성별 및 종교 변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개인 특성 변수들에 따라 빈곤원인 인식의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어 흥미롭다. 이는 곧 가구형태, 거주지역, 학력, 가구소득, 취업지위, 복지수급 경험 등의 인구사회 및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빈곤원인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바다. 또한, 정치이념, 복지태도, 성장/분배에 대한 태도 등의 개인 가치태도에 따라 빈곤원인 인식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표 5> 개인 특성에 따른 빈곤원인 인식의 차이 검증(MANOVA)

변수		Wilks' lambda	F	유의확률	$\eta^2$	관측검정력
인구 사회 특성	성별	.999	1.096	.349	.001	.299
	연령	.957	<b>15.422***</b>	.000	.015	<b>1.000</b>
	가구형태	.995	<b>6.765***</b>	.000	.005	.977
	거주지역	.994	<b>4.008***</b>	.001	.003	.975
	종교	.999	1.967	.117	.001	.510
사회 경제 특성	학력	.974	<b>18.460***</b>	.000	.013	<b>1.000</b>
	소득계층	.981	<b>6.611***</b>	.000	.006	<b>1.000</b>
	가구소득	.976	<b>6.812***</b>	.000	.008	<b>1.000</b>
	취업지위	.981	<b>6.562***</b>	.000	.006	<b>1.000</b>
복지 수급	서비스 수급	.995	<b>6.650***</b>	.000	.005	.975
	현금급여 수급	.998	<b>3.079*</b>	.026	.002	.723
가치 태도	정치이념	.977	<b>16.649***</b>	.000	.012	<b>1.000</b>
	복지수급자태도	.964	<b>25.467***</b>	.000	.018	<b>1.000</b>
	성장/분배태도	.987	<b>17.741***</b>	.000	.013	<b>1.000</b>
	복지정책태도	.984	<b>11.302***</b>	.000	.008	<b>1.000</b>

\* p<.05, \*\* p<.01, \*\*\* p<.001

한편, 분석결과에서 변수들의 설명력( $\eta^2$ )을 살펴보면<sup>10)</sup>, 빈곤원인 인식의 편차에 높은 설명력을 보이는 개인 특성 변수들은 복지수급자에 대한 태도(1.8%), 성장/분배에 대한 태도(1.3%), 정치이념 성향(1.2%) 등의 가치태도 변수들로 확인되어 흥미롭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빈곤원인 인식의 차이가 주로 개인의 사회의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바로 주목된다. 물론, 연령(1.5%) 및 학력(1.3%)의 설명력도 가치태도 변수들과 더불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연령 및 학력수준에 따라서도 빈곤원인 인식을 상당히 달리한다는 점을 또한 확인할 수 있기도 하다.

이상에서는 MANOVA 분석결과를 통해 세 개 유형으로 구성된 빈곤원인 인식의 분포가 어떠한 개인 특성 변수들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상기 분석결과는 어떤 빈곤원인 인식 유형에 개인 특성들이 어떻게 관련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워, 개별 빈곤원인 인식 유형을 종속변수로 하는 차이 검증(ANOVA) 분석이 추가적으로 요청된다.

다음 <표 6>과 <표 7>은 ANOVA 분석 및 사후검증 분석의 결과들로, 개인 특성에 따른 빈곤원인 인식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개인책임 빈곤원인 인식은 거주지역, 가구소득, 취업지위 등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곧, 차이 검증의 결과에서는 농촌에 비해 도시에서, 가구소득이 높은 집단에서, 고용주/자영업 등의 취업지위가 높은 집단에서 개인책임 인식이 유의미하게 높음이 확인되고 있다.

개인책임 인식은 또한 가치태도에 따라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 정치성향이 보수적인 집단에서, 분배 보다는 성장을 중시하는 집단에서 개인책임 원인 인식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복지수급자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지 않은 집단에서 개인책임 인식이 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복지정책에 대한 태도에서는 선별주의 선호 집단이 보편주의의 선호 집단에 비해 개인책임 인식이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닌 것으로 검증되었다. 오히려, 개인책임 원인 인식은 복지정책에 대한 중도적 태도를 보이는 집단에서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흥미롭다.

다음으로, 사회구조 책임의 빈곤원인 인식은 성별과 복지서비스 수급을 제외한 모든 개인 특성 변수들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곧, 50대 이상 연령층에 비해 40대 이하 연령층에서, 중졸 이하의 저학력 집단에 비해 고졸 및 전문대 이상의 상대적으로 높은 학력층에서 사회책임 원인 인식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거주지역이 도시지역의 경우에서, 가구형태로는 취약가구 보다는 일반가구에서, 종교 보유와 관련하여서는 종교가 없는 경우일수록 사회책임 원인 인식이 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취업지위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상용직은 고용주/자영업 및 비경제 활동에 비해 사회책임 원인 인식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사회책임의 인식은 가치태도에 따라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정치적 성향이 진보적인 집단, 성장 보다는 분배를 중시하는 집단, 복지수급자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이지 않은 집단, 그리고 선별주의 복지정책을 선호하지 않은 집단들일수록 사회책임의 빈곤원인 인식이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10) MANOVA 분석결과에서  $\eta^2$ 은 해당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얼마나 설명하는지에 대한 변수의 설명력을 보여주는 계수치이다(양병화, 2006).



<표 6> 개인 특성에 따른 개별 빈곤원인 인식 유형의 차이 검증(ANOVA)

변수		개인책임론			사회구조책임론			운명책임론		
		F	$\eta^2$	관측 검정력	F	$\eta^2$	관측 검정력	F	$\eta^2$	관측 검정력
인구 사회 특성	성별	2.310	.001	.330	.003	.000	.051	.034	.000	.063
	연령	2.144	.002	.639	<b>28.519***</b>	.027	1.000	<b>3.663**</b>	.003	.883
	가구형태	1.621	.000	.247	<b>5.783*</b>	.001	.672	3.753	.001	.491
	거주지역	<b>9.120***</b>	.004	.976	<b>3.027*</b>	.001	.588	<b>4.082*</b>	.002	.727
	종교	.000	.000	.050	<b>4.840*</b>	.001	.595	2.558	.001	.595
사회 경제 특성	학력	1.752	.001	.369	<b>21.569***</b>	.010	1.000	<b>10.826***</b>	.005	.991
	소득계층	1.226	.001	.389	<b>3.769**</b>	.004	.892	<b>6.863***</b>	.007	.994
	가구소득	<b>3.193**</b>	.004	.889	<b>5.493***</b>	.000	.992	<b>3.788**</b>	.005	.940
	취업지위	<b>2.514*</b>	.002	.718	<b>8.630***</b>	.008	.999	<b>2.696*</b>	.003	.752
복지 수급	서비스수급	1.473	.000	.228	.000	.000	.050	<b>11.019***</b>	.003	.913
	현금급수급	1.457	.000	.226	<b>6.335*</b>	.002	.711	.583	.000	.119
가치 태도	정치이념	<b>18.378***</b>	.009	1.000	<b>22.034***</b>	.010	1.000	1.107	.001	.246
	수급자태도	<b>28.950***</b>	.014	1.000	<b>31.138***</b>	.015	1.000	<b>16.322***</b>	.008	1.000
	성장/분배	<b>26.457***</b>	.006	.999	<b>17.097***</b>	.004	.985	.115	.000	.063
	복지정책	<b>14.924***</b>	.007	.999	<b>13.153***</b>	.006	.998	<b>17.435***</b>	.008	1.000

\* p<.05, \*\* p<.01, \*\*\* p<.001

<표 7> 개인 특성에 따른 빈곤원인 인식 유형별 차이에 대한 사후검증

변수		개인책임론		사회구조책임론		운명책임론	
		평균	F	평균	F	평균	F
성별	남(a)	3.28	2.310	2.90	.010	2.86	.115
	여(b)	3.26		2.90		2.87	
연령	30대 이하(a)	3.25	2.144	3.03	<b>28.519***</b> a, b > c, d, e	2.82	<b>3.663**</b> a < d, e
	40대(b)	3.31		2.99		2.88	
	50대(c)	3.25		2.86		2.83	
	60대(d)	3.30		2.83		2.90	
	70대 이상(e)	3.25		2.82		2.89	
가구 형태	일반가구(a)	3.27	1.621	2.91	<b>5.783*</b>	2.86	3.753
	취약가구(b)	3.24		2.86		2.90	
거주 지역	대도시(a)	3.28	<b>9.120***</b> a, b > c	2.92	<b>3.027*</b> a, b > c	2.86	<b>4.082*</b> a, b > c
	중소도시(b)	3.29		2.91		2.88	
	농어촌(c)	3.19		2.86		2.82	
종교	있음(a)	3.27	.000	2.89	<b>4.840*</b>	2.85	2.558
	없음(b)	3.27		2.92		2.88	
학력 수준	중졸 이하(a)	3.26	1.752	2.85	<b>21.569***</b> a < b < c	2.89	<b>10.826***</b> a, b > c
	고졸(b)	3.29		2.90		2.88	
	전문대 이상(c)	3.25		2.98		2.80	
소득	빈곤층가구(a)	3.23	1.226	2.83	<b>3.769**</b>	2.95	<b>6.863***</b>

계층	저소득층가구(b)	3.25		2.88		2.93	a < c, d	a, b > c, d, e	
	중산층가구(c)	3.27		2.93		2.86			
	상위층가구(d)	3.27		2.93		2.82			
	최상위층가구(e)	3.30		2.87		2.81			
가구 소득	100만 원미만(a)	3.22		2.84		2.93	3.193** a, d < c, f	5.493*** a, b < d	3.788** a > d, e, f
	100-200만 원(b)	3.26		2.87		2.88			
	200-300만 원(c)	3.30		2.92		2.88			
	300-400만 원(d)	3.22		2.98		2.83			
	400-500만 원(e)	3.28		2.93		2.83			
	500만 원 이상(f)	3.30		2.92		2.83			
취업 지위	고용주/자영업(a)	3.32		2.84		2.84	2.514* a > e	8.630*** a, e < b	2.696* c > b
	상용직(b)	3.26		2.99		2.82			
	임시/일용/자활(c)	3.29		2.92		2.89			
	무급/실업(d)	3.27		2.89		2.88			
	비경제(e)	3.24		2.87		2.88			
서비스 수급	있음(a)	3.26	1.473	2.90	.000	2.88	11.019***		
	없음(b)	3.28		2.90		2.82			
현금 수급	있음(a)	3.28	1.457	2.87	6.335*	2.85	.583		
	없음(b)	3.26		2.92		2.87			
정치 이념	보수(a)	3.34	18.378*** a > b, c	2.85	22.034*** a, b < c	2.88	1.107		
	중도(b)	3.22		2.90		2.85			
	진보(c)	3.25		3.01		2.85			
수급자 태도	부정적(a)	3.31	28.950*** a, b > c	2.82	31.138*** a < b, c	2.86	16.322*** b > a < c		
	보통(b)	3.31		2.97		2.93			
	긍정적(c)	3.18		2.95		2.81			
성장/ 분배	친성장(a)	3.31	26.457***	2.87	17.097***	2.87	.115		
	분친배(b)	3.23		2.94		2.86			
복지 정책	선별주의(a)	3.26	14.924*** a, c < b	2.86	13.153*** a < c < b	2.85	17.435*** a, c < b		
	중도(b)	3.36		2.98		2.96			
	보편주의(c)	3.23		2.92		2.82			

\* p<.05, \*\* p<.01, \*\*\* p<.001

결론으로, 운명론적 원인 인식도 제반 개인 특성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빈곤원인에 대한 운명론적 인식은 60대 및 70대 이상 노령층에서, 상대적으로 저학력 집단과 빈곤층 및 저소득층 가구에서, 취업지위가 낮은 집단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복지수급 경험 및 가치태도에 따라서도 유의미한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복지서비스의 수급 경험 집단 및 복지수급자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 집단에서 운명론적 인식이 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복지정책에 대한 태도와 관련하여서는 선별주의 및 보편주의 복지정책 모두를 선호하지 않은 중간 집단에서 빈곤원인을 개인 운명으로 여기는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흥미롭기도 하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개인 특성에 따라 빈곤원인 인식이 상이하다는 서구의 관련 연구결과와도 일치되는 바로(Feagin, 1975; Furrham, 1982a; Kluegel and Smith, 1986; Lee et al., 1990; Hunt, 1996; Halman and van Oorschot, 1999; Reutter et al., 2006; Niemelä, 2008; Norcia et al., 2010; Niemelä, 2011), 한국사회에서도 사회구성원의 빈곤원인 인식은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사회경제적 지위, 가치태

도 등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국사회의 빈곤원인 인식이 개인 및 집단적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균열되어 있음을 시사하여 주는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복지이슈를 둘러싼 최근의 사회적 대립과 갈등의 양상을 파악함에 주요한 단서일 수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으로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주목할만한 바를 판단된다.

#### 4) 한국사회 빈곤원인 인식의 결정요인

앞서의 분석을 통해 한국사회 구성원의 빈곤원인 인식은 개인책임론, 사회구조책임론, 운명책임론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포하며, 개인들간 빈곤 원인 인식의 차이에는 개인 특성 변수들이 밀접히 관련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는 빈도 분석 및 이원 분석에 의거한 빈곤원인 인식의 분포 양상을 확인하는 차원에 국한되었기에, 빈곤원인 인식의 결정 양상을 파악하기에는 제한적이다. 여기에서는 개별 빈곤원인 인식을 종속변수, 개인 특성 요인들을 독립변수로 투입한 회귀 분석 모델을 적용하여 관련 요인들의 실제적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사회에서의 주요 빈곤원인 인식 유형의 결정 양상을 파악하고자 하였다<sup>1)</sup>. 이의 분석결과는 다음 <표 8>과 같이 정리되었는데 주요 결과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2)</sup>.

먼저, 개인책임 빈곤원인 인식에 대한 분석에서는 거주지역, 취업지위 등의 변수들과 함께 가치태도 변수들이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곧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취업상태가 비경제활동인 사람에게서 개인책임의 빈곤원인 인식이 두드러지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가치태도 변수들의 영향에서는 보수적인 정치 성향, 친성장적인 가치태도, 선별주의 복지정책의 선호, 복지수급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의 태도를 지닌 경우에 개인책임의 빈곤원인 인식이 높음을 시사하여 준다.

이와 같은 개인책임 인식의 결정양상은 서구 연구결과들과도 대체로 일치되긴 하지만(Halman and van Oorschot, 1999; Niemelä, 2008; Lepianka et al., 2010), 학력 및 경제적 수준의 영향은 기존 연구들과 상이하여 흥미롭다. 서구 연구들에서 개인책임 인식은 대체로 경제적 수준 및 학력수준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흥미롭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개인책임의 빈곤원인 인식은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보다는 가치태도적 특성에 의해 적극 규정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바로, 여타 국가들과는 상이한 빈곤원인 인식의 결정양상이 존재함을 제기하여 준다.

11) 회귀분석모델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검토하고자 VIF계수치와 Tolerance수치를 산출한 결과, 독립변수들의 VIF계수치는 1.02~3.10에 분포하여 임계치 이하로 나타났고, Tolerance 수치도 0.32~0.98에 분포한 것으로 분석되어, 회귀분석결과에서 다중공선성은 의심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2) 분석결과에서 분석모델들은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검증되었지만, Adjusted R<sup>2</sup>수치는 0.033, 0.037, 0.013으로 분석되어 모델 설명력은 대체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구 선행연구들에서 확인된 요인들만으로 한국사회의 빈곤원인 인식 결정을 파악하기에 제한적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바로, 다각적인 결정요인들의 탐색들이 추후 연구들에서는 필요함을 제기하여 준다.

<표 8> 빈곤원인인식 유형별 결정요인(OLS 회귀분석, n=4,182)

독립변수		빈곤원인인식 유형		개인책임론		사회구조책임론		운명책임론	
		B	Beta	B	Beta	B	Beta		
인구 사회 특성	성별(남성) <sup>1)</sup>	.010	.009	.001	.001	.017	.015		
	연령	-.001	-.043	<b>-.005</b>	<b>-.150***</b>	.000	-.016		
	가구형태(취약가구) <sup>2)</sup>	-.007	-.005	-.019	-.013	.021	.014		
	종교(있음) <sup>3)</sup>	-.002	-.002	-.006	-.006	-.032	-.030		
	거주지역 <sup>4)</sup> - 대도시	<b>.114</b>	<b>.104***</b>	.015	.013	<b>.072</b>	<b>.066**</b>		
	중소도시	<b>.114</b>	<b>.103***</b>	.016	.014	<b>.090</b>	<b>.082***</b>		
사회 경제 특성	학력 <sup>5)</sup> - 중졸	.019	.018	.003	.003	<b>.068</b>	<b>.062*</b>		
	고졸	.022	.018	-.025	-.020	<b>.065</b>	<b>.054**</b>		
	욕구소득비	.004	.016	<b>-.024</b>	<b>-.093**</b>	<b>-.011</b>	<b>-.043*</b>		
	취업지위 <sup>6)</sup> - 상용직	-.052	-.038	.062	.044	.022	.016		
	임시/일용/자활	-.038	-.028	.014	.010	.053	.039		
	무급/실업	-.033	-.015	.021	.009	.058	.026		
복지 수급	비경제활동	<b>-.071</b>	<b>-.064**</b>	.011	.009	.034	.031		
	복지서비스수급경험 <sup>7)</sup>	.010	.009	.019	.015	<b>.048</b>	<b>.040*</b>		
가치 태도	현금급여수급경험 <sup>8)</sup>	.005	.005	.014	.012	-.026	-.022		
	정치이념성향 <sup>9)</sup>	<b>-.046</b>	<b>-.077***</b>	<b>.034</b>	<b>.056***</b>	-.005	-.009		
	복지수급자 태도 <sup>10)</sup>	<b>.058</b>	<b>.107***</b>	<b>-.029</b>	<b>-.052**</b>	<b>.024</b>	<b>.045**</b>		
	성장/분배태도 <sup>11)</sup>	<b>-.047</b>	<b>-.067***</b>	<b>.024</b>	<b>.033*</b>	.001	.002		
	(보편) 복지정책태도 <sup>12)</sup>	<b>-.020</b>	<b>-.051***</b>	-.001	-.003	<b>-.014</b>	<b>-.036*</b>		
상수		3.389***		3.141***		2.737***			
R <sup>2</sup>		.038		.041		.018			
adjusted R <sup>2</sup>		.033		.037		.013			
F		8.134***		9.348***		3.978***			

\* p<.05, \*\* p<.01, \*\*\* p<.001

주 1) 여성=0, 남성=1 2) 일반가구=0, 취약가구=1 3) 종교 없음=0, 종교 있음=1

4) 농어촌=0, 중소도시=1, 대도시=2 5) 전문대졸 이상=0, 고졸=1, 중졸 이하=2

6) 고용주/자영업=0, 상용직=1, 임시/일용/자활=2, 무급/실업=3, 비경제활동=4.

7) 복지서비스수급경험 없음=0, 있음=1 . 8) 사회보장수급경험 없음=0, 있음=1

9) 점수가 높을수록 진보적임. 10) 점수가 높을수록 수급자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임.

11) 점수가 높을수록 친분배적임. 12) 점수가 높을수록 보편주의 복지정책에 지지적임.

한편, 사회구조책임 인식의 결정양상에 대한 분석에서는 연령 및 경제적 수준(욕구소득비), 가치태도 변수들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개인책임 인식의 경우와는 상이한 결정 양상을 보여 흥미롭다. 곧, 사회책임의 빈곤원인 인식에는 연령이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연령이 높을수록 사회구조 책임의 원인 인식이 낮은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경제적 수준도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고소득층일수록 사회책임의 원인 인식이 낮고 저소득층일수록 사회책임 인식이 높은 성향이 있음을 확인하여 준다. 한편, 가치태도 측면의 영향은 개인책임 인식과는 상반되게 나타나 특히 주목된다. 진보적 성향, 친분배적 태도, 복지수급자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지닐수록 사회구조 원인 인식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나, 가치태도에 따라 빈곤원인 인식이 상이함을 시사하여 준다.

끝으로, 운명책임 원인 인식의 결정에는 거주지역, 학력, 가구소득, 복지수급 등의 개인 특성이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들 변수의 영향에서는 도시지역 거주자일수록,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빈곤원인을 개인적 불운에서 기인한 것으로 여기는 인식이 높음을 보여준다. 한편, 복지서비스 수급 경험의 유의미한 영향은 복지서비스를 수급한 경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빈곤원인을 개인적 불운으로 여기는 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다. 이는 복지서비스를 수급하기에 이른 상황이 불운 혹은 운명을 탓하는 성향을 높인데서 비롯된 결과로 평가되기도 하지만, 예상치 못한 생애주기상 불운(장애, 질병 등) 발생이 복지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하게 이끈데서 이와 같은 변수 영향이 나타난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운명책임 인식의 결정에는 가치태도 변수들도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개인책임 및 사회책임 인식들과는 달리 정치적 성향, 성장 및 분배 태도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반면, 복지수급자 및 복지정책에 대한 태도 변수가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흥미롭다. 그렇지만, 이들 태도 변수와 운명책임 원인 인식의 상호관계는 상반되게 이해될 수 있어 향후 세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곧, 복지수급자에 대한 부정적 태도 및 선별주의 복지정책의 선호가 운명책임의 원인 인식을 높일 수도 있고, 역으로 빈곤을 운명으로 여기는 원인 인식이 복지수급자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선별주의 복지정책을 선호하도록 할 수도 있어, 이들 간 인과관계 규명에는 별도의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의 분석결과는 한국사회에서 빈곤원인 인식의 결정양상을 보여주는 바로, 특히 개인 특성에 따라 빈곤원인 인식을 달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주목된다. 분석결과에서는 또한 가치태도의 측면이 빈곤원인 인식 유형들 모두의 결정에 있어 주요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나, 사회문화적 맥락의 중요성에 적극적인 관심의 환기가 필요함을 시사하여 준다. 곧, 한국사회에서도 복지국가 발전의 전기가 마련되기 위해서는 사회문화적 풍토의 변화에도 관심과 주목이 적극 요청됨을 상기하여 주는 바이다.

## 5. 결론: 요약 및 함의

사회구성원의 빈곤에 대한 태도 특히 빈곤원인 인식은 해당 국가의 사회복지체제의 특성과 향후 전개양상을 규정하는 측면일 뿐 아니라 해당 사회의 빈곤 양상 및 빈곤층 행태, 빈곤대책 등에도 주요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이에 주목하여, 본 연구에서는 빈곤원인 인식 자료가 새롭게 추가된 8차년도 한국복지패널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한국사회의 빈곤원인 인식의 실태 및 빈곤원인 인식의 결정양상을 실증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분석을 통해 확인된 주요 결과 및 함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빈곤원인 인식 측정 항목에 대한 요인분석에서는 한국사회의 빈곤원인 인식 유형이 개인책임 인식, 사회구조책임 인식, 운명론 인식 등의 세 가지로 구성, 분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인식 유형의 분포에 대한 분석결과에서는 개인책임 인식이 가장 높게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 개

인적 불운 등을 원인으로 인식하는 운명론적 인식은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별 빈곤원인 항목들의 분포에서도 가장 높게 지지된 빈곤원인 항목은 '책임감 부족(90.1%)', '동기 및 노력의 부족(89.9%)', '적절한 습관 및 태도의 결여'(86.6%) 등으로 주로 개인책임의 원인 인식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빈곤원인 인식 분포에서 주요하게 확인된 점은 한국사회에서 개인책임 빈곤원인 인식이 높다는 점으로, 이는 서구 유럽복지국가들과는 상이한 양상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선행 연구들에서 미국, 호주 등 자유주의 복지국가에서는 개인책임 빈곤원인 인식이 두드러지는 반면 서구 선진복지국가에서는 사회책임 인식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빈곤원인 인식과 복지국가 유형의 일련의 관련성을 보이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한국사회의 빈곤원인 인식유형 분포는 중요한 학술적, 정치적 함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곧, 한국 사회복지의 낙후성과 저발전에는 사회 대중들에게서 높게 수용, 지지되는 개인책임 빈곤원인 인식이 주요한 배경 혹은 원인일 수 있음을 제기하여 주며, 이는 복지국가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정치적, 경제적 측면 뿐 아니라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도 변화가 요청된다는 점을 시사하여 준다.

둘째, 개인 특성에 따른 빈곤원인 인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사회경제적 특성, 가치태도 등에 따라 개인의 빈곤원인 인식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개인 특성에 따른 빈곤원인 인식의 분포는 상이한 양상을 지닌 것으로 분석되어 빈곤 인식에도 사회적 균열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개인책임 인식의 분포 양상(고소득 집단, 고용주/자영업의 취업지위, 보수성향, 친성장주의)과 사회구조책임 인식의 분포 양상(40대 이하 연령층, 상용직, 진보성향, 친분배주의)은 상반된 양상을 보여, 사회 집단들에 따라 빈곤원인에 대한 인식 격차가 상당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한국사회에서의 복지이슈를 둘러싼 사회적 대립과 갈등 양상에는 사회집단들 간 이와 같은 빈곤원인 및 복지이슈의 격차 또한 주요하게 관련된 것일 수 있음을 감안하면, 본 연구에서 파악된 빈곤원인 인식의 균열 양상은 복지정책의 역동성을 이해함에 주요한 단초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빈곤원인 인식의 결정양상에 대한 분석에서는 빈곤원인 인식 유형에 따라 결정양상이 상이하다는 점과 함께 한국사회의 빈곤원인 인식의 결정은 서구 국가들과는 일부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구 국가들의 빈곤원인 인식 결정에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사회경제적 지위 특성, 가치태도 측면이 공히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에 비해, 한국사회에서는 사회경제지위의 영향은 두드러지지 않는 반면 가치태도 측면의 중요한 영향을 확인할 수 있어 주목된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빈곤 혹은 복지문제에 대한 대중들의 태도는 사회경제적 지위 보다는 오히려 개인의 정치 성향 및 사회가치들에 크게 좌우되는 상황임을, 또한 서구 사회와는 달리 빈곤 및 복지문제가 사회계층 이슈로 적극 간주되지 않는 사회문화적 성향이 높은 편일 수 있음을 시사하여 주목된다. 이와 같은 사회문화적 성향이 어떠한 사회적 기제를 통해 재생산되고 있는지, 이러한 사회문화적 성향이 한국의 복지발전 과정에는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등의 관련 의문들은 추후 분석을 통해 규명되어야 할 주요 과제라 판단되며 후속 연구들의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는 최초로 전국적인 표본 데이터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통해 한국사회 구성원

들이 지닌 빈곤원인 인식의 실태와 분포, 이의 결정양상에 대한 이해를 제고함에 일조하였다는 점에서 일련의 성과를 산출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렇지만, 다음과 같은 제한점 또한 주지되어야 할 부분이다.

먼저, 대중들의 빈곤원인 인식은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일개 년도의 데이터에 대한 분석만으로 한국사회의 빈곤원인 인식의 실태와 특성을 규정짓기에는 한계를 지닌다. 한국사회 빈곤원인 인식에 대한 일반화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중단 데이터를 활용한 후속 연구들이 요청되는 바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활용한 복지인식 조사자료는 60대 이상 노령층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빈곤원인 인식의 실제 양상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특히, 사회인식은 연령에 민감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타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사회 빈곤원인 인식의 실재를 재차 확인하는 추가적 조사 연구들이 부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여타 국가들과의 상이한 빈곤원인 인식의 양상, 한국사회 복지체계의 특성과 빈곤 인식의 관련성 또한 본 연구에서 충분히 해명되지 못한 관련 연구문제로, 이는 후속 연구들의 과제로 또한 남겨두고자 한다.

## 참고문헌

- 김영모, 1986, “도시빈민의 복지의식과 그 의미: 영세민과 비영세민의 비교”, 『한국사회복지학』, 9: 3-19.
- 김정희, 2009, “차상위계층 여성의 빈곤에 대한 인식과 공공부조수급 경험”, 『사회복지정책』, 36(1): 143-171.
- 배효숙·박은주·박병현, 2007,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빈곤에 대한 태도와 서비스 질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9(1): 119-144.
- 손태홍, 2006,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인식한 빈곤의 원인과 빈곤정책: 부산과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2(2): 141-167.
- 양병화, 2006, 『다변량 데이터 분석법의 이해』, 커뮤니케이션북스.
- 안치민, 1995, “사회복지에 대한 의식과 계급”, 『고려사회학논집』, 9: 211-227.
- 이병량·박성진, 2003, “빈곤에 관한 한 인식과 한국의 복지정책: 자격있는 빈곤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3(1): 41-60.
- 이인재, 1998, “IMF관리체제이후 한국인의 사회복지 의식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12: 85-110.
- 임민정·박수경, 2012, “유아교사의 빈곤에 대한 태도 관련 변인”, 『아동교육학연구』, 16(2): 381-397.
- 정선옥, 2011, “빈곤 아동의 빈곤 인식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7(1): 181-201.
- \_\_\_\_\_, 2012, “비빈곤층 초등학생의 빈곤 인식에 관한 연구”, 『아동교육』, 21(3): 285-302.
- 최 균·류진석, 2000, “복지의식의 경향과 특징: 이중성”, 『사회복지연구』, 16: 223-254.
- Blank, R., 2003, “Selecting among anti-poverty policies”, *Review of Social Economy*, 61(4): 447-469.
- Blomberg, H., Kroll, C., Kallio, J., and Erola, J., 2013, “Social workers’ perceptions of the causes of poverty in the Nordic countries”,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23(1): 68-82.
- Bullock, H. E., 1999, “Attributions for poverty: A comparison of middle-class and welfare recipient attitude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9(10): 2059-2082.

- \_\_\_\_\_, 2004, "From the front lines of welfare reform: An analysis of social workers and welfare recipient attitude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9: 2059-2082.
- Bullock, H. E., Williams, W. R., and Limbert, W. M., 2003, "Predicting support for welfare policies: The impact of attributions and beliefs about inequality", *Journal of Poverty*, 7(3): 35-36.
- Cozzarelli, C., Wilkinson, A. V., and Tagler, M. J., 2001, "Attitudes toward the poor and attributions for poverty", *Journal of Social Issues*, 57(2): 207-227.
- Feagin, J. R., 1972, "Poverty: We still believe that God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 *Psychology Today*, 6(2): 101-129.
- \_\_\_\_\_, 1975, *Subordinating the Poor: Welfare and American Beliefs*, NJ Prentice Hall: Upper Saddle River.
- Feather, N. T., 1974, "Explanations of poverty in Australian and American samples: The person, society, or fate?", *Australian Journal of Psychology*, 26(3): 199-216.
- Forma, P., 1999, *Interest, Institutions and the Welfare State, Studies on Public Opinion Toward the Welfare State*, Helsinki: Stakes.
- \_\_\_\_\_, 2002, "Does economic hardship lead to polarization of opinions towards the welfare state?", *Journal of Social Policy*, 31: 187-206.
- Furnham, A., 1982a, "Explanations for unemployment in Britain",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2: 335-352.
- \_\_\_\_\_, 1982b, "The protestant work ethic and attitudes towards unemployment", *Journal of Occupational Psychology*, 55: 277-285.
- \_\_\_\_\_, 1985, "The determinants of attitudes towards social security recipients",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4: 19-27.
- Gallie, D., and Paugam, S., 2002, *Social Precarity and Social Integration*, Report based on Eurobarometer 56. 1. European Commission Directorate-General Employment.
- Gilens, M., 1999, *Why American Hate Welfare: Race, Media and the Politics of Antipoverty Polic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Goffman, I., 1963, *Stigma: Notes on the Management of Spoiled Identit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Golding, P., and Middleton, S., 1982, *Images of Welfare. Press and Public Attitudes of Poverty*, Oxford: Basil Blackwell.
- Halman, L., and Van Oorschot, W., 1999, *Popular Perceptions of Poverty in Dutch Society*, Tilburg: Tilburg University.
- Hardiman, N., McCashin, T., and Payne, D., 2004, *Understanding Irish Attitudes to Poverty and Wealth Irish Social and Political Attitudes*, Liverpool University Press.
- Harper, J. L., Wagstaff, G. F., Newton, J. T., and Harrison, K. R., 1990, "Lay causal perceptions of third world poverty and the just world theory",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18: 235-238.
- Hunt, M. O., 1996, "The individual, society, or both? A comparison of black, latino, and white beliefs about the causes of poverty", *Social Force*, 75(1): 293-322.
- \_\_\_\_\_, 2002, "Religion, race/ethnicity, and beliefs about poverty", *Social Science Quarterly*, 83(3): 810-831.



- Kangas, O., 2003, "The grasshopper and the ants: Public opinion on deservingness in Australia and Finland", *Journal of Socio-Economics*, 26: 475-494.
- Kluegel, J. R., and Smith, E. R., 1986, *Beliefs about Inequality: Americans' Views of What is and What ought to be*, New York: Aldine de Gruyter.
- Kluegel, J. R., Csepeli, G., Kolosi, T., Orkeny, A., and Nemenyi, M., 1995, "Accounting for the rich and the poor: Existential justice in comparative perspective", 179-207, in *Social Justice and Political Change: Public Opinions in Capitalist and Post-Communist States*, edited by Kluegel, J. R., Mason, D. S., and Wegener, B., Berlin and New York: Walter de Gruyter.
- Lee, B. A., Jones, S. H., and Lewis, D. W., 1990, "Public beliefs about the causes of homelessness", *Social Forces*, 69(1): 253-265.
- Lee, B. A., Lewis, D. W., and Jones, S. H., 1992, "Are the homeless to blame? A test of two theories", *Sociological Quarterly*, 33(4): 535-552.
- Lepianka, D., 2004, *Towards the Understanding of Popular Poverty Explanations*, Notes on a Ph.D project: Poverty Perceptions In A Cross-National Comparison, Tilburg University.
- Lepianka, D., Van Oorschot, W., and Gelissen, J., 2009, "Popular explanations of poverty: A critical discussion of empirical research", *Cambridge University Press*, 38(3): 421-438.
- Lepianka, D., Gelissen, J., and van Oorschot, W., 2010, "Popular explanations of poverty in Europe effects of contextual and individual characteristics across 28 European countries", *Acta Sociologica*, 53(1): 53-72.
- Morcöl, G., 1997, "Lay explanations for poverty in Turkey and their determinants",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7(6): 116-122.
- Niemelä, M., 2008, "Perceptions of the causes of poverty in Finland", *Acta Sociologica*, 51(1): 23-40.
- \_\_\_\_\_, 2011, "Attributions for poverty in Finland: A non-generic approach", *Research in Finnish Society*, 4: 17-28.
- Nilson, L. B., 1981, "Reconsidering ideological lines: Beliefs about poverty in America", *The Sociological Quarterly*, 22: 531-548.
- Norcia, M., Castellani, A., and Rissotto, A., 2010, *The Process of Causal Attribution of Poverty Preliminary Results of A Survey in Italy*, Institute of Cognitive Sciences and Technologies, National Research Council, Italy.
- Reutter, L. I., Veenstra, G., Stewart, M. J., Raphael, D., Love, R., Makwarimba, E., and McMurray, S., 2006, "Public attributions for poverty in Canada", *Canadian Review of Sociology and Anthropology*, 43: 1-22.
- Saunders, P., 2003, "Stability and change in community perceptions of poverty: Evidence from Australia", *Journal of Poverty*, 7(4): 1-20.
- Smith, K. B., and Stone, L. H., 1989, "Rags, riches, and bootstraps: Beliefs about the causes of wealth and poverty", *Sociological Quarterly*, 30(1): 93-107.
- Sun, A. P., 2001, "Perceptions among social work and non-social work students concerning causes of poverty", *Journal of Social Work Education*, 37: 161-173.
- Svallfors, S., 2006, *The Moral Economy of Class: Class and Attitudes in Comparative Perspective*,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van Oorschot, W., and Halman, L., 2000, "Blame or fate, individual or social? An international comparison of popular explanations of poverty", *European Societies*, 2(1): 1-28.
- Wilson, G., 1996, "Toward a revised framework for examining beliefs about the causes of poverty", *Sociological Quarterly*, 37(3): 413-428.

## Analysis on the Public Perceptions about the Causes of the Poverty in Korea

Lee, Sangrok

(Chonbuk National University)

Kim, Hyeongkwan

(Chonbuk National University)

The public perceptions about the cause of the poverty are generally considered as the important subject because they are assumed to have profound influences on the anti-poverty strategies, the features of the welfare system, and the welfare politics. Yet, there have been few studies on the public perceptions about attributions for poverty in Korea. In this article, we explore the popular perceptions about the causes of the poverty and investigate the determinants of the various beliefs about the causes of the poverty in Korea. The data derive from the Welfare Attitudes data of the 8th Korea Welfare Panel Survey.

The results indicates that Koreans are more likely to support the individualistic explanations on the causes of the poverty than the structural and the fatalistic explanations. The results of regression model analysis show that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determinants of the three types of poverty explanations, but subjective variables have the strong effects on all of the poverty explanations in Korea.

In this study we find that Koreans are more likely than the western european welfare states to endorse individualistic explanation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underdevelopment of the welfare system in Korea is assumed to have the connection with the popular individualistic explanations. And, they suggest that there are needed to have notices to changing the public perceptions of the poverty and the cultural context of the social welfare in order to advance the welfare state in Korea.

Key words: poverty, public perception, values, cause of poverty, attributions for poverty

[논문 접수일 : 13. 11. 09, 심사일 : 13. 11. 19, 게재 확정일 : 13. 12. 27]